<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XV>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금융정책

정부가 재벌기업의 부도를 막는다는 명분아래 「금융기관자율협의회」를 만들어 「부도방지협약」을 체결케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공식화하더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 지원 전담기구」를 구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금난에 봉착한 부실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

명분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한-자금난이 완화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기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에 주는 타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나, 사실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재벌기업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줌으로써 「갱제」 무대책을 피하면서 여론의 중심을 「한보사태」에서 비롯된 「현철난국」에서 경제로 돌려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자율협의회」는 재벌기업들의 부실채무에 억눌려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있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51대 재벌기업의 부도를 막아줌으로써 연쇄부도로 인한 경제난국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부도를 막는다는 이름아래 채권회수를 연기해줌으로써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데 따른 역자금난을 우려한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반발을 불러왔고,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채권회수를 앞당기는 역기능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 부도를 선도하는 「재벌 보호-중소기업 말살」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부실채권 정리를 한 곳에 모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부실의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나, 이 또한 정치권 및 관료들의 외압에 따른 금융부실을 국민일반에 떠넘기는 역할에 그칠 것이 분명하고, 사업성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업공사나 금융기관들이 외형적인 담보의 가치만을 가지고 부실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장래성있는 건실기업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힘입어 담보력을 갖춘 재벌기업 보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기구는 성업공사를 확대 개편해 법정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기관 출연 및 채권발행 차입 등으로 「부실채권 정리기금」 1조5000억원을 조성해 5년동안 운영, 담보가 없어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부실여신 2조4000억원을 수탁정리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으나 담보가 있어 회수 가능한 부실채권 9조4000억원을 전담기구가 매입하여 담보물에 대한 시장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재매각한다는 것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 재벌기업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이나 계열기업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협의회에서 매입 정리함으로써 자금난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경유착에 따른 부실 또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부실을 국민이 떠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며, 더 큰 문제점은 모든 판단의 기초가 담보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담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실한 재벌기업-부동산 투기기업은 살아남고,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실기업은 아무런 해택도 받을 수 없는 모순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도방지 및 부실기업 보호정책이 국내 재벌기업들의 구태의연한 경영수법을 답습케 할 것은 불문가지이고, 결국에는 경쟁력 저하를 재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이 의심되는 문제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일시적으로 부도를 방지하고 경제에 주는 타격을 줄이면서 「갱제실정」을 모면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경제에 위해를 가하는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상적인 부도방지책 및 재벌편중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을 보호해줄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생력이 없는 기업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건실경영을 유도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모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여신폭을 늘리며, 금리인하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다.

<화학저널 1997/5/5>